



산업은행 민영화 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4월 총선, 12월 대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산은금융 기업공개와 같은 현안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지 때문이다. 지난해 열린 산은금융그룹 출범 2주년 기념식. 사진_연합DB

산은금융 민영화 첫발 내딛다

연내 상장 추진... MB 대선 공약 사항
정부 방침 불구 증시 상황이 변수

유럽 재정 위기로 올해 증시 상황이 여전히 어렵겠지만 기업공개(IPO)시장은 몹시 뜨거울 전망이다. 삼성에 버랜드와 삼성석유화학 같은 삼성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현대오일뱅크, 미래에셋생명, 코카콜라, 카페베네 등 대형 기업들이 증시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산은금융지주까지 끼어들 태세이니 IPO시장이 달아오를 만도 하다.

“연내 지분 10% 이상 매각 추진”

산은금융의 연내 증시 상장 방침은 신년 벽두의 금융계와 증권계를 강타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연합뉴스의 보도 전문 채널 뉴스와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산은금융의 IPO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드디어 산은금융 민영화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만큼 올해 4분기까지 지분 10% 이상을 공모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IPO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기획재정부, 정책금융공사, 금융위, 산업은행이 산은금융의 연내 IPO를 목표로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산은지주 지분은 정부가 9.7%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90.3%는 정부 출자회사인 정책금융공사가 갖고 있다.

정부는 산은금융 지분 매각 계획을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다. 금년에 지분 10%를 매각하고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 30%와 60%를 각각 처분하는 일정이다. 강 회장은 그러나 “정부의 지분 매각 계획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스케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작년 세외 예산안에 기업은행 지분 매각 수입을 편성했으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자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산은금융의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정부와 산은금융이 민영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올해 충분한 정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차기 정권에서 민영화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산업은행법은 2014년 5월까지 단 한 주라도 산은금융의 최초 지분을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산은금융의 민영화 전략은 우리금융 같은 대형 금융기관을 인수해 상장하는 방식이었다. 우리금융 인수가 무산되자 인수·합병(M&A) 기회를 열어 놓는 동시에 IPO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정부와 산은금융이 IPO와 민영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올해에 충분한 정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차기 정권에서 민영화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은금융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의 하나다.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등 계열사를 묶어 지주사 형태를 만든 뒤 민영화해 재정을 확충한다는 구상이었다.

산은금융 조직 개편… IPO 대비 영업 강화

산은금융은 민영화 추진 방침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조직 개편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산은금융은 1월12일 영업력 강화와 조직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기존의 종합금융그룹(CIB)협의회와 리테일협의회를 CB(기업금융), IB(투자금융), PB(개인금융), AM(자산운용)의 4개 핵심 사업별 협의회로 세분화했다.

또 전사적 마케팅으로 그룹 영업력을 키우고자 그룹마케팅협의회를 신설했다. IPO 지원, 사회공헌 확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등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팀은 홍보실로 격상됐고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산업은행은 조직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종전의 9본부 4센터 44부실을 10본부 5센터 45부실 체제로 개편했다.

최고재무책임자(CFO)에는 발행시장실장, 서울지역본부장 등을 거친 최윤석 전무, 최고전략·마케팅책임자(CSO)에는 산업은행 종합기획부장 등을 거친 서상철 산은금융 전략담당전무가 각각 배치됐다. 산은금융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성과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한 직원을 중용하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강만수 회장의 원칙”이라고 이번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은 민영화 변수 많아 안갯속

그러나 산업은행 민영화 일정은 그리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같은 대형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산은금융 IPO 같은 현안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간 기업의 IPO가 보통 10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국책기관인 산은금융은 정부 협의와 국회 동의 등 절차가 훨씬 복잡해 올 4분기 목표는 너무 빠듯하다는 이유에서다. 현 정권의 공약이므로 내년에 정권이 교체되면 민영화 작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시 침체로 산은금융이 제값을 받지 못할 공산도 크다. 추후라도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인다면 예상일이 아니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KB,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작년 말 현재 평균 주기순자산비율(PBR)은 0.65에 지나지 않는다. 시가총액이 자산을 모두 판 금액에 한참 못 미친다는 얘기다.

윤만호 산은금융 부사장은 “공모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예상가는 산출해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PBR이 워낙 낮은 상황이라 평균보다는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시장 상황 자체는 IPO에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며 “지분의 30%까지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투자자의 지분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앞으로 검토를 거쳐 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농협 사업구조 개편과 산은지주 민영화 및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일괄 추진한다는 소문도 나온다. 오는 3월 초로 예정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신용·경제사업 분리)을 앞두고 농협에 대한 현물출자(2조 원)와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위해 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산은금융과 기업은행 주식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봉석 경제부 기자 anfour@yna.co.kr